

<기자의 눈>: 위안부 문제 30년의 일본 외교 명예 회복의 원점으로 돌아가 = 호리야마 아키코(마이니치신문 서울 지국장)

2021년 03월 17일 마이니치 신문 조간 10면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 정부가 전후 보상을 둘러싼 법적 해석의 차이를 넘어 인권 구제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한 분야이다. 위안부가 1991년 한국 내에서 처음으로 피해를 고백하고 나서 올해로 30년이 되었다. 지금까지 일본은 '보상금' 지급 등 위안부 지원책을 두 차례 실시했다. 그러나 한일관계가 악화된 끝에 한국 지방법원이 올 1월에 일본 정부에게 위안부에 대한 배상을 명하였다. 30년의 한일 외교는 무엇이 결여되어 있었을까? 위안부의 명예회복을 목표로 삼고 원점으로 돌아가 생각해보고자 한다.

◇ 추가 조치 2회, 평가 받지 못함

법원은 판결로, 「주권국가는 타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국제법상의 '주권면제'의 원칙이 반인도적 범죄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일본 정부의 배상은 '마지막 구제수단'이라고 하였다. 원고 12명 중에는 일본에서 배상을 받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지만 원고 전원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한국 법조계에서는 '예상 외의 판결'이라는 반응이 많다. '마지막 구제수단'은 외교라고 평가하여 한국 정부에 협상을 촉구하는 판례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위안부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에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9년 서울 고등법원이 한국 외교부로 하여금 외교적 노력을 약속하게 하여 조정이 성립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판결에 대하여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웠다"고 말하며 정부 견해와는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시정조치는 강구하지 않았다. 한일협상에 정통한 한국 외교부 전 고위공직자는 "대응을 잘못하면 지금까지의 외교적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위기감을 더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거하여 법적으로 위안부 문제도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과의 외교적 협의를 거쳐 추가 조치를 두 차례 강구했다. 첫 번째로, 민간 모금에 의한 「아시아 여성 기금」이 1998년~2002년, 1인당 200만엔의 「보상금」을 실시하여, 위안부의 약 30%에 해당하는 61명(기금 발표는 60명)에게 지급하였다. 두 번째는, 2015년 한일 합의의 결과로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기부하여 한국 정부가 설립한 「화해·치유 재단」을 통해 생존자에게 1억원(약 950만엔), 유족에게 2000만원(약 190만엔)을 지급하였고, 합의 당시 생존했던 위안부 47명 중 35명, 유족 199명 중 64명이 지급 받았다.

위안부 지원단체는 모두 반대하고, 한국 정부는 위 조치 시행 후 비협력적인

자세로 돌아섰다. 일본 측이 한정된 정보로 집행한 여성 기금 방식에 비하여 한국 재단이 돈을 지급한 한일 합의는 수령 인원수가 70%로 늘었으나, 문재인 정권이 그 성과를 평가한 적은 없다.

“돈을 받은 위안부랑 유족의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재단 관계자는 말한다. 위안부가 고령화됨에 따라 지급할 때 가족에게도 설명하였고, 전원이 공표를 거부했다. “한일관계를 책임지기보다는 돈을 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앞으로는 위안부 문제와의 관계를 끊고 싶다는 느낌이였다” 고 한다.

◇ 속마음의 침묵, 청취 회로 차단

일본 외무성은 위안부 문제의 대처를 웹사이트에서 소개하고, 한일 합의는 “많은 위안부 분들의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계속 침묵을 지키는 위안부와 그들 가족의 심정을 직접 들어봤을까? 기금은 '보상금'을 받은 30%의 위안부에게 역대 총리의 편지를 건네주고, 그 후에도 순회 방문 사업을 계속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그 사업도 중단하였다. 생존 위안부는 현재 15명이지만 일본 정부와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일본 정부가 과거를 반성한 증거가 되는 돈은 한국에서는 ‘위자료’라는 이미지가 항상 따라 다녔다. 기금 시절에는 돈을 지급 받은 위안부가 동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지원단체와 마찰이 빚는 등 한국 시민사회로부터 큰 상처를 입었다. 일부 위안부는 공적인 기념비에 이름을 넣지도 못했다. 위안부 지원사업 실무를 담당해 온 한국 정부 관계자는 “기념사업이나 공동연구와 같은 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침묵만 남아 버릴 것” 이라고 우려한다.

한일 양국 정부가 한일 합의에 다시 한번 생명을 불어넣을 의지가 있다면 소송이나 일본이 지급한 금전에 대한 찬반과 관계없이 숨진 위안부를 포함한 차별 없는 명예회복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지난 1월 판결이 가져온 외교적인 상처는 깊고, 법적인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한일 양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되었는가에 전력을 쏟기 전에 법적 해석을 넘어 외교적 노력을 시작한 원점으로 돌아가 자문해주기를 바란다. 위안부의 명예가 지금 회복되었는지 그 물음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한층 더 외교적 노력을 거듭해야 법적 해결책이 보일 것이라 생각한다.